

#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정치가 사법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두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다.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약작같이 막아야 한다”며 정부 주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현안에서 최대한 자기 입장과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자.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피해자, 검찰

검찰개혁 관련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

검찰 보완수사권 쟁점에 “세밀한 검토 필요”

“여야 특검법 합의 몰랐다… 원치 않아”

“내란 진실 규명,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개 문제”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며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다 제거할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여야가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것을 두고는 “몰랐다”며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건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며 “그걸 (정부조직법) 개정과 어떻게 맞바꾸냐. 정부 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이를 반복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내란 사태에 관해 오늘도 시그럽더라”라며 “(여야)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는데, 그걸 이재명이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겠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는 “위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며 “입법부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100억 미래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李 “北 태도 냉랭하지만…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남한 정부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방송도 안 하고, 몇 가지 완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북한) 획 돌아서서 갑자기 환한 표정으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뀐 거라고 기대했다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

“한반도 평화,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안보·경제·민생 위해 필요”

“北,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해… 피스메이커 역할”

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에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됐다. 특히 핵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 문제는 미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

라며 “한국 정부는 사인도 못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시작전권 없는 나라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제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해 내면 진정한 피스메이커’(평화전도사) 아니겠는가(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해 주시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저의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뉴시스

#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하나… 나주혁신도시 16개 기관 ‘촉각’

광주·전남공동(빛가람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일명 ‘알박기 방지법’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대거 교체가 불가피해진다. 당연히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5년)에 공공기관장 임기(3년)를 맞추고, 정권 교체 후 6개월 이내 기관장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153개 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나주혁신도시는 16개 기관 중 11곳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가장 먼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다. 광주 지역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정치적 이력과 에너지 분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여

공운법 개정안 통과 시 대규모 물갈이 현실화  
정치권 갈등, 공공기관 운영 불안정성 우려도

당 내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출신의 흥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치색이 강한 인사들이 교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미 일부 기관은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한전KPS 사장은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장기간 기관장이 부재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수장 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당연히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이 미뤄지는 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나주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특화도시 육성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기관장 교체로 인한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 관행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임명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는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패스트트랙을 고려중이며,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안 실효성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만큼,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을 인선해야 한다”며 “정치적 교체보다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연 70억 손실’ 광주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 지원 절실”

##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국회 토론회서 촉구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수십억원의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둬 제기됐다.

광주교통공사는 전남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무임 승승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7000억원에 육박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운영 기관들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

기요 역시 최근 수년간 크게 오른 만큼 공공요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1984년부터 41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온 도시철도 무임 승차는 국가 주도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임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55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만 놓고 보면 2020년 63억원, 2021년 64억원, 2022년 70억원, 2023년 76억원, 2024년 79억원 등 연평균 손실액이 70억원에 이른다.

노사 대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담보

상태에 놓인 무임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낮은 운임으로 운영기관이 겪는 어려움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병남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Organic & nature

Fresh food 신선한식품

www.jindoarirangmall.com

**진도아리랑몰**

고객센터  
061. 542. 9631